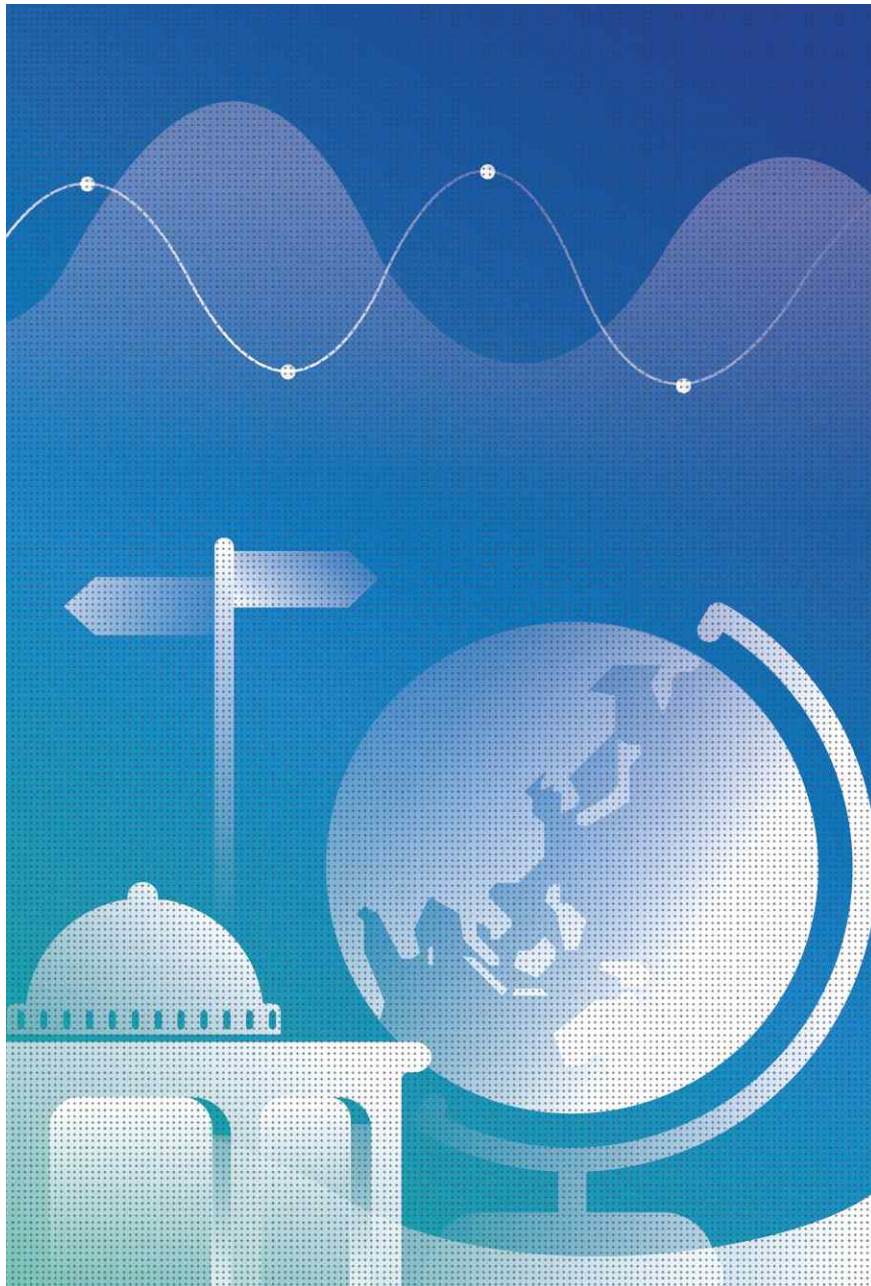


#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1-지역이슈-7(2021.09)

## 미·중 패권경쟁 및 코로나19 시대의 신남방국가 투자환경과 시사점



### CONTENTS

I. 신남방국가와 미·중 패권경쟁

II. 신남방국가의 코로나19 현황

III. 신남방 주요국 투자환경

IV. 시사점

#### 작성

선임조사역 김찬수 (02-6252-3613)

avik@koreaexim.go.kr



## I. 신남방국가와 미·중 패권경쟁

### 1.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남중국해 해양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간 해양영토분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이 자국 수역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sup>1)</sup>)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 분쟁의 범위는 남중국해 전체를 포괄하며, Spratly Islands(중국명 난사군도), Paracel Islands(시사군도), Macclesfield Bank(중사군도), Pratas Islands(동사군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음.

[그림 1]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자료: doopedia.co.kr

- 2002년 ASEAN과 중국은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을 채택하고 협상을 통한 영유권 분쟁 해결에 합의하였으나, 이후로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음.

1)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필리핀은 2013년 1월 중국 함선의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점거에 대해 UN해양법협약(UNCLOS<sup>2)</sup>) 위반을 이유로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sup>3)</sup>)에 제소한 바 있으며 PCA는 2016년 7월 "중국의 9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남중국해가 중국의 EEZ가 아니라고 판결함.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난사군도 암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함.
- 2021년 3월에 중국 선박 220여 척이 필리핀 EEZ 암초지역에 정박함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해안경비대 함정을 출동시켜 초계활동을 하였고, 2021년 6월에는 중국 군용기가 말레이시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상공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재점화됨.

**[표 1] ASEAN-중국간 남중국해 분쟁 관련 주요 협상 내용**

시기	주요 협상 내용	비고
2002.11.	- 아세안-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DOC) 발표	-
2011. 7.	- 아세안-중국 DOC 이행 가이드라인 채택	-
2016. 7.	- 아세안-중국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DOC 이행방안 공동성명서 채택	중국-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
2016. 9.	- 남중국해 내 우발적 충돌에 관한 강령(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적용에 관한 공동성명서 채택 - DOC 이행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 핫라인 가이드라인 채택	제19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
2017.11.	- 아세안-중국 남중국해행동강령 프레임워크(Framework of the Code of Conduct) 채택 - 남중국해행동강령(COC) 협상 개시 및 2021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	제20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

자료: KIEP(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 2021. 7. 16)

## 2.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남중국해 분쟁에도 개입

-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주둔하기 시작한 아프가니스탄에서 2021년 8월 말 철수하는 등 '9·11 시대'를 종결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Pivot to Asia',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이어받아 아시아 중심의 외교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해리스 부통령은 2021년 8월 동남아 순방시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번영에서 아주 중요하며, 21세 역사가 쓰여질 때 상당 부분은 인도-태평양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존중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적인 주장이라고 규정함.
-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 간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며,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3)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3. 인도, 베트남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비교적 적극적이며 인도네시아는 실리 추구

- 인도는 2020년 6월 중국 및 인도 병사간 국경 충돌사태 이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보복조치를 취함. 인도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등 Quad<sup>4)</sup> 회원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인도 및 일본 등과 경제 및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외교정책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정보 교환 및 해양경비 지원 등 안보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 싱가포르의 무역, 투자, 금융서비스 및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외교정책의 목적이거나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확대에 의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또는 중국 중 일방택일 및 관계강화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싱가포르는 역내 균형을 위해 중국의 반발을 사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역내 군사활동 지원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은 주로 자국 경제적 실리에 영향을 받으며, 조코위 정부는 해양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였음. 중국과 북나투나해 영유권 분쟁을 거치면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 8월에 미국과의 외교 장관 회담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함. 미국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인도-태평양 전략 상 중요한 국가이며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전망이다. 한편,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중국 및 미국 모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리를 추구할 전망이다.
- 캄보디아는 중국의 투자 및 금융지원 등으로 친중 국가로 분류되며, 라오스, 태국 및 베트남 등과 달리 중국과 국경 분쟁이 없음. 중국은 일관성 있게 훈센 정부를 지원하였으며, EU 및 미국 등의 인권 관련 비판 증가에도 훈센 정부를 변호함.
- 라오스도 중국의 투자 및 금융지원 등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임. 라오스는 채무상환 연장 등을 위해 중국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되어 있지 않아 ASEAN 등 국제 포럼에서 중국의 이익을 지원하는 국가임.
- 미얀마는 군정 저항세력에 대한 유혈 진압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정은 중국 등 쿠데타를 비판하지 않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집중할 전망이다.

### 4. ASEAN 지역 설문조사 결과, ①ASEAN이 주요국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②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 싱크탱크인 ISEAS-Yusof Ishak Institute가 2021년 2월 발간한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설문조사<sup>5)</sup>에 의하면 ASEAN 응답자의 69.1%가 ASEAN의 3대 우려사항 중 하나로 ‘ASEAN이 주요국 패권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ASEAN 회원국들이 주요국의 대리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문에 동의함.

4)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US, Japan, Australia and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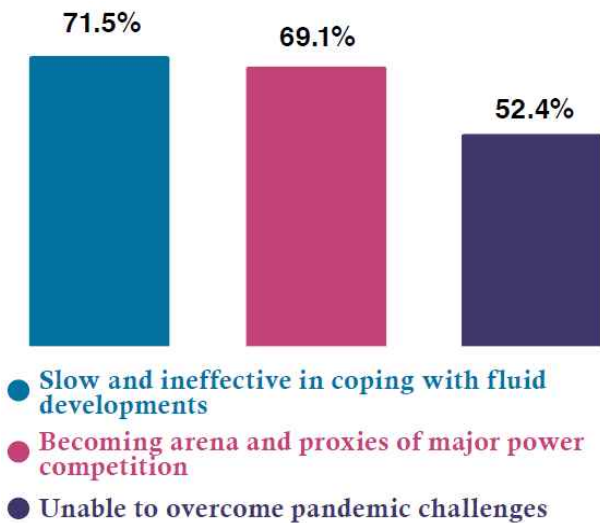
5) ASEAN 10개국 1,032명의 학계 또는 연구기관, 정부기관 인사 등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국적별로는 베트남 17.0%, 싱가포르 15.3%, 미얀마 15.1%, 태국 12.7%, 인도네시아 12.5%, 말레이시아 11.3%, 필리핀 6.5%, 라오스 3.9%, 브루나이 3.2%, 캄보디아 2.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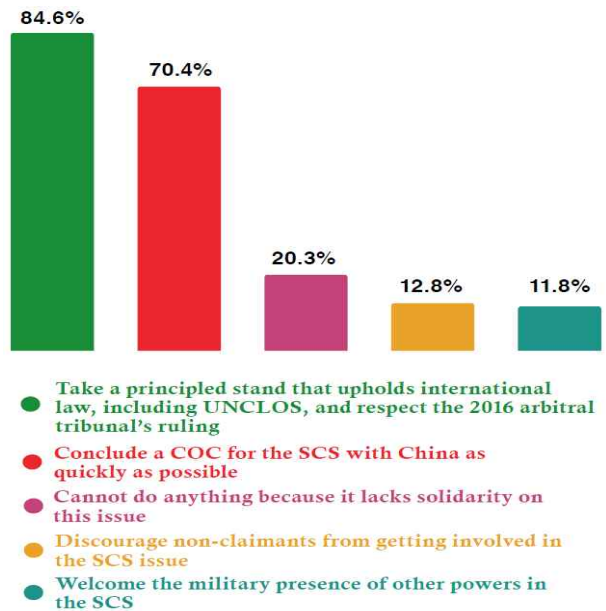
- 또한,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 등 행위'(62.4%), '연안국 EEZ 및 대륙붕에서의 중국의 침해'(59.1%) 등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선택함.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ASEAN의 대응으로는 'ASEAN은 국제법을 지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함'(84.6%), 'ASEAN은 가능한 빨리 중국과 남중국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결론지어야 함'(70.4%) 등을 선택함.

[그림 2] ASEAN의 3대 우려사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그림 3]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ASEAN의 대응  
단위: 백만 달러



자료: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 II. 신남방국가의 코로나19 현황

### 1. 신남방국가 코로나19 개황

**코로나19 관련 10만명 당 누적 확진률은 말레이시아 및 인도, 누적 사망률은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가 높은 수준**

- ASEAN 및 인도 등 신남방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확진자수는 인도가 약 33백만 명 수준으로 가장 많으며, 누적 사망자수도 인도가 약 44만명 수준으로 가장 많음.
- 신남방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10만명 당 누적 확진자수는 말레이시아가 5,33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가 2,375명, 필리핀이 1,803명으로 많은 수준임. 10만명 당 누적 사망자수는 말레이시아가 50.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48.6명, 인도가 31.8명으로 많은 수준임.

[표 2] 신남방국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사망자수

국가명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10만명 당)	(10만명 당)	(10만명 당)
말레이시아	1,725,357	(5,330.77)	16,382	(50.61)
인도	32,768,880	(2,374.55)	438,560	(31.78)
필리핀	1,976,202	(1,803.42)	33,330	(30.42)
태국	1,204,729	(1,725.97)	11,589	(16.60)
인도네시아	4,089,801	(1,495.23)	133,023	(48.63)
싱가포르	67,459	(1,153.08)	55	(0.94)
미얀마	399,282	(733.84)	15,389	(28.28)
브루나이	2,641	(603.69)	8	(1.83)
캄보디아	92,616	(553.96)	1,892	(11.32)
베트남	449,489	(461.78)	11,064	(11.37)
라오스	14,816	(203.64)	14	(0.19)

주: 2021년 8월 말 누적 기준

자료: WHO.

**10만명 당 신규 확진률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및 태국이 높고, 신규 사망률은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이 높은 수준**

- 신남방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10만명 당 일주일간<sup>6)</sup> 신규 확진자 수는 말레이시아가 471.5명으로 가장 많고, 브루나이(175.6명), 태국(173.0명), 필리핀(108.2명), 베트남(93.5명) 등도 많은 편임.
- 신남방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10만명 당 일주일간 신규 사망자 수는 말레이시아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2.6명), 베트남(2.5명), 인도네시아(1.7명) 등의 순서임.

6) 2021년 8월 25~31일 기준



[표 3] 신남방국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사망자수

국가명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사망자 수		
		(10만명 당)	(10만명 당)	(10만명 당)
말레이시아	152,592	(471.46)	2,040	(6.30)
브루나이	768	(175.55)	5	(1.14)
태국	120,778	(173.03)	1,801	(2.58)
필리핀	118,578	(108.21)	1,369	(1.25)
베트남	91,033	(93.52)	2,398	(2.46)
미얀마	20,905	(38.42)	767	(1.41)
라오스	2,195	(30.17)	3	(0.04)
인도네시아	81,635	(29.85)	4,771	(1.74)
인도	294,107	(21.31)	3,450	(0.25)
캄보디아	2,975	(17.79)	84	(0.50)
싱가포르	883	(15.09)	5	(0.09)

주: 2021년 8월 25~31일 기준.  
자료: WHO.

## 2. 신남방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 [말레이시아] 신남방국가 중 10만명 당 누적 확진자수·사망자수, 신규 확진자수·사망자수에서 각각 1위로 신남방국가 중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일일 확진자 수도 2만 명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말레이시아 무히딘 총리가 2021년 8월 중순 총리직을 사퇴하였으며, 이스마일 부총리가 신임 총리로 지명되어 8월 21일 취임함. 말레이시아는 약 41%의 상대적으로 높은 2차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지속되고 있음.
- [태국] 2021년 8월 초 기준 코로나19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약 24% 수준이며, 접종 백신 중 약 49%는 Sinovac 백신이며 약 44%는 AstraZeneca 백신임. 2021년 8월 초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태국 정부는 2021년 8월 말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등을 위해 쇼핑몰 및 식당 등 영업을 9월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함.
- [베트남] 2021년 4월 말부터 시작된 4차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19일 이후 1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8월 28일 17,42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이 지속됨. 이에 따라, 호찌민시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외출금지 등 봉쇄조치<sup>7)</sup>를 강화하였으며, 하노이시도 9월 6일부터 15일간 봉쇄조치를 연장하였음.
- [인도네시아] 2021년 6월부터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으나 7월 중순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8월 30일 5,436명을 기록함.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8월 말 수도권 등의 사회활동제한조치(PPKM<sup>8)</sup>)의 일부 완화를 발표함.

7) 호찌민시는 2021년 9월 15일까지 생필품이나 의약품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및 야간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함.

8) PPKM: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



- [인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2021년 5월 초 전후 2차 유행<sup>9)</sup>시 41만 명 수준에서 6월 1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8월 말 3만 명 수준으로 감소세가 지속됨. 2021년 8월 말 기준 인도에서는 약 6.2억 회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으며, 인구 13.8억 명 중 약 1.4억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함.
- EIU에 의하면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Sinovac 등 코로나19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백신<sup>10)</sup>을 사용하고 있어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보급률이 필요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봉쇄조치(lockdowns) 및 국경통제 등의 방역규제가 2022년 말까지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신남방 국가별 인구의 60% 이상 백신접종 시기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를 2021년,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은 2022년, 인도네시아·필리핀은 2023년, 라오스는 2024년, 미얀마는 2025년 이후 등으로 예상됨.

[그림 4] 아시아 코로나 백신접종 추진일정



주: 2021년 8월 11일 예측 기준.

자료: EIU.

- ISEAS-Yusof Ishak Institute가 2021년 2월 발간한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설문조사에 의하면 ASEAN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0.7%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국가별로는 긍정적 평가가 베트남(96.6%)과 브루나이(93.9%), 싱가포르(92.4%) 등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필리핀(53.7%), 인도네시아(50.4%), 태국(36.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의 49.0%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제공’을 강조함.

9) 인도에서는 2020년 9월 코로나19 1차 유행이 발생했고, 2021년 5월 초 전후 2차 유행이 일어남.

10) Pfizer-BioNTech 95.0%, Sinopharm 79.0%, Johnson & Johnson 66.9%, Oxford-AstraZeneca 63.1%, Sinovac 51.0%(EIU)





### 3. 코로나19 관련 미·중의 백신 외교

- 상기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설문조사에서는 ASEAN의 10개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sup>11)</sup>)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ASEAN에 가장 많은 도움을 제공한 국가’로 중국(44.2%), 일본(18.2%), EU(10.3%), 미국(9.6%), 한국(5.4%) 등이 선택됨.
- 2021년 8월에 중국은 시노백 및 시노팜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100개 국 이상에 원조, 수출, 공동생산 등의 방식으로 7억 7,000만 회분 이상 공급했으며, 또한 2021년 전세계에 20억 회분의 백신 제공 및 COVAX<sup>12)</sup>에 1억 달러 기부 계획을 밝힘.
- 중국은 2021년 1월에 미얀마와 필리핀에 시노팜 백신을 각각 30만회 분과 50만회 분씩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캄보디아에도 시노팜 백신 100만회 분을 원조하기로 함. 인도네시아는 2021년 1월에 중국 시노백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300만회 분을 수입함. 중국은 베트남에 2021년 8월까지 270만 회분의 중국 백신을 기부하고, 2021년 9월 300만회분 이상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힘.
- 미국은 2021년 8월 초 1.1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65개국에 무상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인도네시아가 800만 회분, 필리핀이 약 624만 회분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음. 미국은 또한 100개 저소득 국가에 5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가 주로 도입한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효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백신 800만 회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보건 협력을 강화함.
- 필리핀에서 중국산 백신 접종자들이 코로나19 대거 감염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약 624만 회분을 무상으로 지원함.
- 미국은 베트남에 기존에 제공한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에 이어 2021년 8월 해리스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시 100만 회분의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11)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EU, 미국

12) 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개도국 백신 지원 프로젝트



### Ⅲ. 신남방 주요국 투자환경

#### 1.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 신남방정책은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방시 신남방정책과 한-ASEAN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힌 후 본격화됨.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People(교류 증진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Prosperity(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Peace(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구축) 공동체 등 3P 공동체가 제시됨. 신남방정책은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신남방지역을 우리 경제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지역공동체를 구축 하자는 정책임.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1월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플러스'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전략적 7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음.

[표 4] 신남방정책플러스 7개 이니셔티브

7개 이니셔티브	내 용
1.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1. 감염병 대응 지원 및 K-방역 경험 공유 2. 의료인력 역량 및 의료체계 지원 3. 역내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의료기술 R&D 및 의료산업 상생 협력
2. 한국형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1. 인적 역량 개발 및 K-Education 모델 공유 2. 교류 확대와 연계한 한국어 사용기반 확대 3. 미래 기술인력 역량 개발 기여 4. 공공행정 선진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3.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	1. 쌍방향 문화 교류 및 문화 플랫폼 구축 2. 한류 확산과 연관사업 동반 성장 3. 관광 및 스포츠 교류 지평 확대 4. 다문화 포용성 강화
4.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1.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 촉진 2. 연대와 협력을 통한 통상 확대 기반 조성 3. 기업 책임 경영 및 현지 기여활동 확대 4. 에너지·자원 분야 확대 기반 조성
5. 상생적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1. 농어촌 개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2. 농어업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3. 스마트시티 개발 및 인프라 개선 4. 인프라사업 재원조달 원활화
6.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산업 협력	1. 4차산업분야 협력 2. R&D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3. 스타트업 파트너십 강화 4. 미래산업 협력 플랫폼 구축
7.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 협력	1.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협력 2.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공조 체계 제고 3. 해양 보호 및 환경 협력 4. 초국가범죄 및 국제평화 협력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2. 신남방 주요국<sup>13)</sup> 투자환경

### [베트남] 성장률, 사업환경 및 정치·치안 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나 재정적자 지속 및 투자부적격 등급

-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19년까지 7%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하였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를 제외한 ASEAN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인 2.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6.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IMF).
- 베트남의 GDP 규모는 2016년 2,521억 달러로 말레이시아(3,013억 달러)의 83.7% 수준이었으나, 높은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2020년 3,408억 달러로 말레이시아(3,383억 달러)를 추월하였고, 1인당 GDP도 2016년 2,720달러에서 2020년 3,499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필리핀(2020년 3,330달러)을 추월함. 다만, 베트남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S&P 기준으로 BB로 투자부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의 세계은행 사업환경 관련 Doing Business 순위는 발표연도 기준 2015년 189개 국 중 90위 및 2016년 190개 국 중 82위에서 2019년<sup>14)</sup> 70위로 상승하는 등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다만, 창업 관련 절차가 다소 많은 편이며, 사업청산 관련 채권회수율이 다소 낮은 편임.
- 베트남은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등 정치 및 치안 환경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1년 1월 말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응우옌 푸 쯁 서기장이 3회 연속으로 서기장에 임명되었으며, 동 연임은 베트남 공산당 역사상 최초의 3연임임. 베트남은 대다수 상장기업의 외국인투자한도 설정 자유화 등 경제적 자유화 정책과 함께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한 민심 부응 등으로 정치적 안정이 예상됨.

### [인도네시아] 사업환경 개선 및 정치·치안 안정 노력 중이나 재정·경상수지 적자 지속

-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sup>15)</sup> 대국으로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2020년 GDP 규모는 ASEAN 최대인 약 1.06조 달러로 ASEAN의 GDP 3.1조 달러 중 34.4%를 차지하고 있는 ASEAN의 맹주국이며 주석, 니켈, 석탄,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임.
- 경제성장률은 2016년 이후 민간소비 및 정부의 인프라 등 공공투자 증가에 힘입어 5%대를 유지하였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제 타격으로 -2.1%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필리핀(-9.5%), 태국(-6.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2021년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 투자여건 개선 조치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등으로 3.9% 수준으로 전망됨. 다만, 인도네시아는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외부 충격 발생시 루피아화 가치가 다소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13)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 비중, 해당국의 잠재력을 감안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인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4) 2020년에는 미발표.

15) 2억 7,020만명(IMF)



-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 관련 Doing Business 순위는 과거 중하위권을 형성하였으나 2014년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집권 이후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Doing Business 순위가 2015년 189개 국 중 106위 및 2016년 190개 국 중 91위, 2019년 73위를 기록하는 등 중상위권 수준으로 상승함. 다만, 창업 관련 절차가 다소 많은 편이며, 법적 분쟁해결 관련 변호사비 등 비용이 다소 높은 편임.
- 인도네시아는 FDI 등 투자 확대를 위해 옴니버스법<sup>16)</sup>을 2020년 11월 발효하여, 사업허가 및 투자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업종 확대, 투자인센티브 확대, 노동 유연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치안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 정치·치안 환경이 다소 미흡하나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준임.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4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1년 1월 여론조사<sup>17)</sup>에서 69.8%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59.6%로 다소 하락함.
- 인도네시아는 2020년 12월 강경 이슬람단체 이슬람수호전선(FPI<sup>18)</sup>)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2021년 8월 테러를 모의한 '제마 이슬라미야<sup>19)</sup>' 소속 단원 등 53명을 체포하여 조직 재건을 방지함.

#### [인도] 대규모 내수시장과 함께 사업환경 개선 중이나 정치·치안 환경은 다소 미흡한 수준

-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sup>20)</sup> 대국 및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대규모 내수시장, 풍부한 노동력 및 영어 구사력 등을 바탕으로 2020년 GDP 규모는 약 2.7조 달러로 ASEAN(3.1조 달러)에 버금가는 수준임.
- 2014년 이후 모디 정부의 시장친화적 경제개혁 정책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7% 내외를 유지하였음. 2019년에는 민간소비 둔화 및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0%로 둔화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봉쇄조치의 여파로 -7.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21년 경제성장률은 소비 심리 회복 및 수출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외국인투자 유입 등으로 9.5% 수준으로 전망됨.
- 인도의 사업환경 관련 Doing Business 순위는 발표연도 기준 2015년 189개 국 중 130위 및 2016년 190개 국 중 130위 수준으로 하위권을 형성하였으나, 인도 모디 총리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규제 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2019년 63위를 기록하는 등 중상위권 수준으로 상승함. 다만, 법적 분쟁해결 및 재산권 등록 관련 시간과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편임.
-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의 민주주의 국가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으며 모디 총리는 2019년 총선에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하였음. 인도 정부가 대테러 조직 강화 등 치안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종교 갈등 및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위협이 잠재되어 있는 등 인도의 정치 및 치안 환경은 다소 미흡한 수준임.

16)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17) Lembaga Survei Indonesia

18) Front Pembela Islam

19) Jemaah Islamiyah: 동남아시아 이슬람 통합 국가 건설을 목표로 1990년에 결성된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테러 단체

20) 13억 7,860만명(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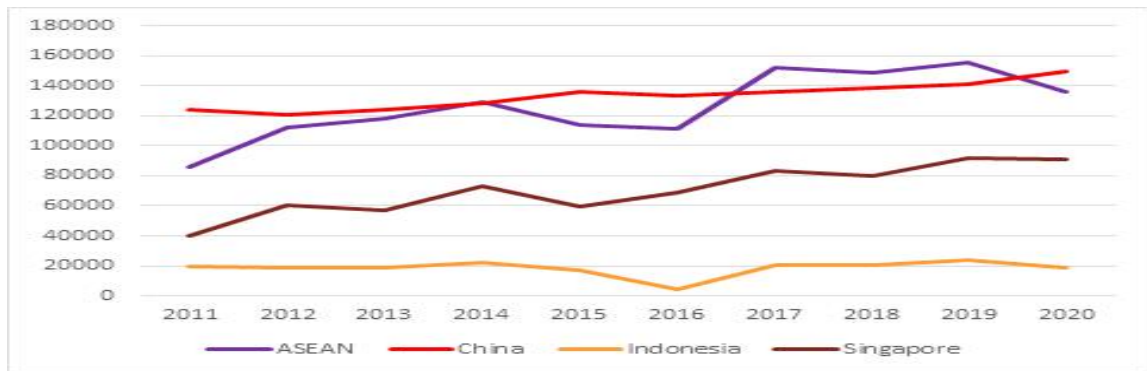
## IV. 시사점

### 1.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ASEAN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어 신남방정책을 강화할 필요

- 국제 지정학적 측면에서 ASEAN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미-중 패권경쟁이 만나는 지점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의 입장에서 ASEAN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ASEAN에 대해 우리나라도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세계 기준으로 2011년~2020년 중 ASEAN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1.26조 달러로 중국의 FDI 유입액(1.33조 달러)의 95% 수준에 이르며,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대해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연도별로는 2014년에 ASEAN의 FDI 유입액이 중국의 FDI 유입액을 상회한 바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계 해외직접투자(FDI)는 중국보다 ASEAN에 더 많이 유입되는 등 ASEAN의 '포스트 차이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면모가 강화되고 있음.

[그림 5] 전세계의 대 ASEAN 및 대 중국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 ASEAN과의 경제협력은 ASEAN의 수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ASEAN에 상호 윈-윈 효과가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ASEAN은 역내 물리적, 제도적, 인적 부문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2016년에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sup>21)</sup>'를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인프라<sup>22)</sup>, 스마트시티<sup>23)</sup>, 공공데이터 네트워크 등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 30%에 육박하는 대 중국 교역의존도 축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신남방 진출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대 중국 교역규모는 2020년 2,415억 달러로 교역대상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역 비중도 2017년 22.8%에서 2020년 24.6%로 확대되는 등 대 중국 교역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특히, 홍콩 포함 시 2020년 기준 대 중국 교역규모는 2,737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세계 대상 교역액의 27.9%를 차지하는 등 과도하게 높은 대 중국 교역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21)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22)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은 2021년 3월 '인도네시아 바탐 향나담 공항 확장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23)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필리핀 클라크 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베트남 하이퐁 교통관리 기본계획 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선정함.





[표 5] 대 중국 교역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10,522	11,401	10,455	9,801
대 중국 교역액	2,400 (2,810)	2,686 (3,166)	2,434 (2,771)	2,415 (2,737)
대 중국 교역비중	22.8 (26.7)	23.6 (27.8)	23.3 (26.5)	24.6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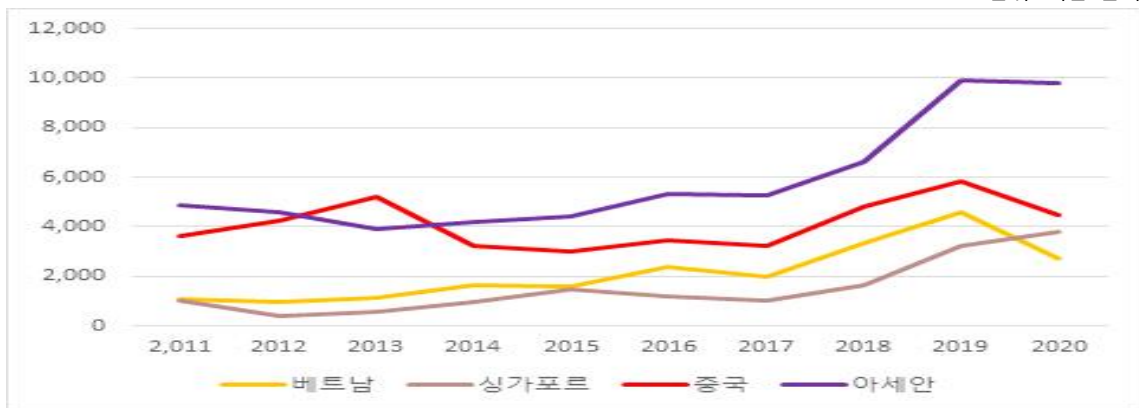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홍콩 포함

자료: 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중국 해외투자규모는 2019년 5,84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4,497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위 수준을 유지함. 한편, 우리나라의 대 ASEAN 해외투자는 2013년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매년 대 중국 투자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대 ASEAN 투자 증가세 지속으로 이러한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특히, 2014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ASEAN 3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33.3억 달러로 대 중국 투자(32.0억 달러)를 추월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2020년에는 대 중국 투자가 45억 달러로 전년(58.5억 달러)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ASEAN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97.8억 달러로 대체로 전년(99.2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림 6] 우리나라의 대 ASEAN 및 중국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 중국의 사드(THAAD<sup>24</sup>) 관련 경제적 보복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의존도 축소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ASEAN 국가와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ASEAN 진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가 필요함.
- 신남방 진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 이외에도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Shopee<sup>25</sup>) 및 Lazada 등 채널을 활용할 필요도 있음.

24)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25) 동남아 6개국 등에 거점, 동남아 모바일 전자상거래 1위, '20년 매출액 354억 달러, 다운로드 2억 회, 700만 이상의 판매자와 1만 개 브랜드 입점



### 3.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에 대한 백신외교 필요

- 태국에서는 2021년 8월 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방문시 '우리나라가 2021년 9월 말 태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다소 과장된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백신지원에 대한 기대가 강함. 베트남 총리는 2021년 9월 베트남 삼성전자 휴대폰공장을 방문해 백신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코로나19는 신남방국가 사업환경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에 백신 여력이 생기는데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 백신접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신남방정책 중점 추진 대상국 등에 대해 백신외교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ASEAN 국가별 인구의 60%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2022년 4분기),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2023년), 라오스(2024년), 미얀마(2025년 이후) 등임.
  - IFRC<sup>26)</sup>는 2021년 8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ASEAN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현지에서 봉쇄령이 내려져 공장가동을 하락<sup>27)</sup>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경영 정상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6)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919년에 각국 적십자사의 국제적인 연합체로 창설되었으며, 평시에 재해구호 활동과 적십자사 발전계획 지원 등을 임무로 함.

27) 삼성전자 호치민 공장의 경우 가동 중단시 하루 손실액이 170억원 수준으로 추산됨.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등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부품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부품 수급 차질로 현대차그룹의 경우 국내공장에서 생산량까지 조절하는 상황임.